

국힘 “자체 경쟁력 ↑” 민주 “소상공인 보호” 정의 “부채탕감”

4·10 총선 공약 비교

소상공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끝난 후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크게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며, ‘제2의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보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노리고 있다.

◆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 이구동성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공약을 먼저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을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한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당별 소상공인 지원 공약 비교

|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녹색정의당 |
|-----------------|---|---|--|
| 매출·경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총 28조원 공급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한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 2배 연장 온누리상품권 10조원으로 확대 발행 및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산재보험 지원(2025년) 및 노령소상공인 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반영 추진 전통시장 주차환경 및 경영 개선,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및 ‘임대료 분담제’ 추진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골목상권도·소매업 쿠팡서비스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고 규모 확대 배달플랫폼과 공정배달료로 소평하기 좋은 마을상권 조성 |
| 육성·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상권 선도, 지역대학에 관련학과 신설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 육성(신산업창업사관학교 입고 소상공인 확대) 소상공인 전용 메이커스페이스 신규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및 소상공인 내일채움 공제로 자산 형성 지원 소상공인 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 불경기시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탕감 실시(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 조성 및 부채 100조원 맵) 골목형 상권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 확대 최저임금 보조 및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가맹점·대리점 갑질금지 및 임대료 완화를 추진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을 실현 |
| 재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차주 공공정보 등재기간 단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센터에서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비 기술교육, 부품지원 및 폐업전환 지원 금융지원체계 구축,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

정책자금·상품권 확대엔 한목소리
 與 ‘로컬크리에이터’로 상권 선도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콘텐츠 강화
 野 전문은행 설립 등으로 금융지원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자산형성 도와
 정의당, 상생위한 공정배달료 산정
 긴급금융회생기금 30兆로 부채매입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 상품을 판매하는 ‘배달플랫폼’을 조성하고 판매자-기사-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배달료’를 산정해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 **소상공인 육성·보호 방안에선** 각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련한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취약한 소상공

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해 지역의 상권을 선도하고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창업사관학교로의 입학 유도를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체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이밖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핵심 골자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이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채 100조원을 맵하겠다고 했다.

또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관련 공약에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것도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채무 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들의 친환경기술 교육을 위해 카센터에서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범야권 지지율 우위 구도… ‘오차범위 밖’ 결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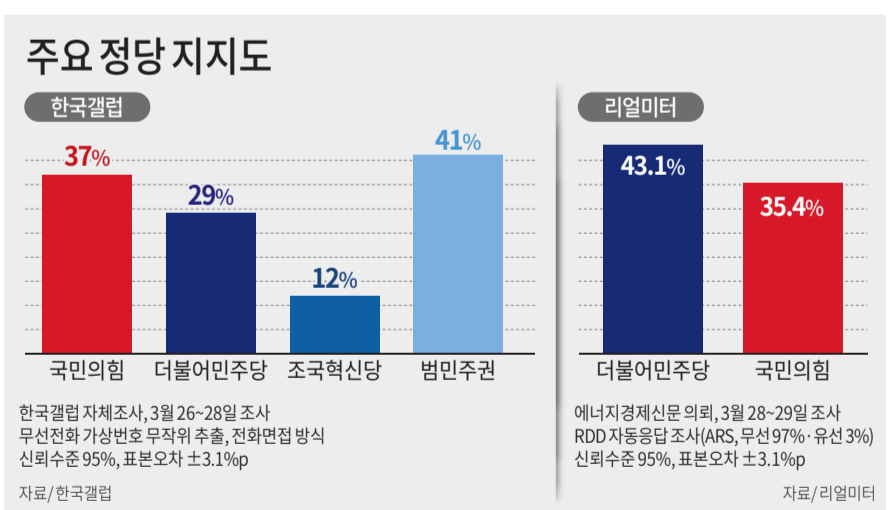
비례정당 투표서도 범민주 우세 정권심판론·尹 부정평가 작동 野 후보 논란 등 반전 가능성 잔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구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5.4%,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43.1%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3.6%, 자유통합당 2.7%, 진보당 1.6%, 녹색정의당 1.4% 순이다.

정당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2월5주차 조사(46.7%)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 35.4%에 이르렀다. 반면 민주당은 2월5주차 조사(39.1%) 이후 회복을 했지만,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43.1%를 기록했다. 아울러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1월4주(국민의힘 36.6%, 민주당 44.9%) 이후 2개월 만이다.

또 리얼미터에서 같은 기간 조사한 비례정당 투표의향을 살펴보면 범민주 우위 구도가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2%, 조국혁신당은 1.8%포인트 상승한 29.5%,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1%포인트 하락한 19%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8.5%가 된다. 비례정당 투표의향에서

도 여권과 야권의 지지도가 18.3%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셈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37%)이 민주당(2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는 정당지지도 조사에 조국혁신당(23%)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을 나눠 가진 형태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3월1주차 조사(6%)에 비해 6%포인트 올랐다.

이외에 정당지지도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순이

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가 아닌 민주당 연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명은 투표의 영향을 볼 때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3월 조국혁신당 등장과 함께 범야권이 확장·급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민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당이 여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10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갤럽의 22대 총선 성격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응답 비율은 40%,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49%였다. 갤럽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은 1년간 구도 반전 없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최근 20주 동안 꾸준히 50~60%대를 오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분투표까지는 8일이 남은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논란에 휩싸이며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집권여당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반전을 시도할 것 같고, 민주당은 악재가 있음에도 대처를 않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양면석 부동산 대출 문제나 김준혁 막달 등 민감한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중도층에게 어떤 반감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무선(97%)·유선(3%)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달 26~28일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